

# 이동 혁신서 애물단지로... 전동킥보드, 위험물 전략

개인 이동수단 교통사고 해마다 ↑ 인도·도로 등 무분별한 주차 눈살 승차인원 초과에도 처벌조항 전무



서울 강남구 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구세윤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혁신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가 위험물로 전략하고 있다. 거리를 누비는 공유 전동킥보드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나 질서외식은 미비한 탓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6개 업체가 서울에서 3만58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만6580대에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 150여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이 이동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보유 전동킥보드 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어서 전동킥보드 수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혁신이라더니 통행 위협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 제한 속도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등 안전 의식은 부재한 모습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로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인도나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이용자가 많다. 이 때문에 거리를 걷는 행인이나 자동차 운전자가 불쑥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놀라는 일이 부지기수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많아 접촉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두명 이상이 함께 타고 있는 위험한 질주도 자주 목격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가량 빠르게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

라 행인, 운전자까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교통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무 곳에서나 쉽게 빌리고 주차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특성 탓에 주차 문제도 발생한다. 일부 이용자가 인도나 도로 한가운데, 건물 출입구 앞 등에 주차해 불편을 끼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규제는 완화되는데 안전은?... 지자체별 대응 마련 분주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유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승차 인원을 초과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과태료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현재도 운전면허 없이 대어가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등 도로 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16개 주요 업체와 주차 권장구역과 제한구역을 설정해 올바른 주차가 이뤄지도록 협업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도 자체 콜센터와 전용보험을 마련하는 등 안전과 주차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특성상 특정 주차공간 마련은 어렵기에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수가 늘었지만 위험한 운행을 하는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도 늘었다”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금융위 “저축銀 PF대출시 대손충당금 더 적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 예고 코로나 장기화에 건전성 악화 우려 적립률 하향규정 삭제·내부통제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이 증가할 경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

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시 정상분류자산의 경우 2~3%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0.5%로 낮춰 적립했다.

또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10%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아파트인 경우 부실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7% 적립비율을 적용해 왔다. 예외 규정을 삭제해 분류기준에 맞는 적립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을 결정·변경했

는데, 이 경우 회계 분석 의혹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하고, 적립기준과 적립결과를 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원은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구조조정이후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저축은행이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분석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1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자체모형을 구축하고, 자산1조원 미만인 소형사는 저축은행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모형을 활용한다. 또 위기 취약 저축은행은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법제처 및 규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후 고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텔레콤은 길찾기·버스·지하철 통합정보 서비스인 'T맵 대중교통' 앱의 업데이트를 통해 지하철의 열차 칸별 혼잡도 예측 정보를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

SKT

지하철 혼잡도 정보 제공

SK텔레콤은 길찾기·버스·지하철 통합정보 서비스 'T맵 대중교통' 앱을 통해 지하철의 각 칸별 혼잡도 예측 정보를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5일부터 'T맵 대중교통' 앱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될 예정으로, 먼저 수도권 1~8호선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추후 수도권 미적용 호선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승객들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앞서 칸별 혼잡도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지하철을 보다 안전하게 분산·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

'T맵 대중교통' 앱으로 지하철 이용시 클릭 한번으로 '초록·노랑·주황·빨강' 4단계의 색상을 통해 칸별 혼잡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초록'은 승객이 칸내 여유로운 상태를, '빨강'은 서 있는 승객들의 어깨가 밀착돼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등을 나타낸다. 또 모든 칸이 같은 혼잡도 단계일 경우,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두 개의 칸을 알려주는 '추천' 기능을 적용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이낙연 “탄력·선택근로제 올해 법제화 필요... 中企 부담 없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기중앙회-이낙연 대표 간담회

소상공인 활력 회복 현안과제 논의



(왼쪽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

영훈 당대표비서실장, 김경만 의원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앙회 회장단,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

지 업종 소상공인 등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논의된 과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지원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

정제재 완화·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 7개였다.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에 이낙연 당대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내에 반드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우분투(UBUNTU)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여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